

기사연 리포트

19 호

“기독교와 정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권 두 언)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한국기독교인의 선택은? _ 김영주 3

기독교와 정치: 20대 대선 국면에서 생각하다 _ 최형묵 5

공공신학적 정치참여,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의 선 구성하기 _ 성석환 1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_ 김성한 27

기사연 소식 3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권 두 언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한국기독교인의 선택은?

김 영 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지금 한국민들의 눈은 대통령선거에 쏠려있다. 한국사회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5년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한 복판을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럴 것이다. 나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기독교인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많다. 선거 과정이 공명정대하여 그 결과도 모두 수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의 처신이나 입장표명이 기독교 전체의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정파가 경쟁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선거철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단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면서 중립적 자세를 취하거나 평론가적 입장에 머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 올곧은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크고 작은 배려심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갈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사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 통찰력’을 가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 기사연 리포트 19호를 꾸려 보았다. 물론 적은 지면으로 꾸려지는 기사연 리포트가 가진 한계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생각의 단초를 열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필자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현실 정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관점의 원고를 부탁드렸다. 이에 대해, 세명의 신학자가 각각 1) 민중신학, 2) 공공신학, 3) 재세례파(혹은 평화교회)의 관점에서 생각을 나누어 주었다. 현 상황에서, 신중히 새겨 들어야 할 성찰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그 통찰력을 기독교 신학과 역사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한국교회에서 출발한 민중신학, 현재 미주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공공신학, 그리고 재세례파의 평화운동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깊은 통찰력을 담지하고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선거철이 되면 늘 느끼는 일이지만, 후보들은 제각각 온 세상을 바꿀만한 큼직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막상 선출된 권력은 그 공약을 잊어버리거나, 여러 제약을 핑계로 폐기하는 경우를 보곤 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에는 여러 면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이 보여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면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후보들을 평가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즉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다. 이 원칙하에 세워진 정책공약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정의와 공의가 입 맞추고,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분단이 원죄와 같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 이 시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기독교와 정치: 20대 대선 국면에서 생각하다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 기독교윤리학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만큼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유력 후보 본인들의 개인사와 공직에서의 역할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여기에 대통령 후보자에게서 보기 드문 극언과 실언, 각종 구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바람에 우리 사회 구성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겨루는 선거 본연의 성격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인을 향한 높은 도덕성의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경합하는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정치인에게 정말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 사회 계층과 세력들이 갈등하는 현실에서 다수의 구성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 실현의 의지와 예측,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 제시와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개인적 도덕성 논란과 각종 구설수가 전면에 두드려진 지금 대선국면은 그 중요한 판단기준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어 안타깝다. 전환기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정책과 그 실현 방법을 둘러싼 쟁론이 부차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정책을 둘러싼 대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을 빌미로 성별·세대별 편 갈라치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선거전은 이후에도 큰 부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편 갈라치기로 결집효과를 거두게 되면 투표율은 높아질지 몰라도 선거 이후에도 각 진영 간 앙금으로 통합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더 나은 미래사회를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

기독교와 정치 또는 종교와 정치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특정 후보를 두고 목사들이 압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후보가 무속신앙에 기대는 행태가 쟁점이 되는 와중에 다시 특정 기독교 세력이 그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함축하는 사태로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오늘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늘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의 종교화와 동시에 종교의 정치화를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곧 그것은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다든지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정치의 종교화는 정치가 권력의 강화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한다든지 간섭하는 행위를 뜻하며, 종교의 정치화는 종교가 정치권력에 기대어 특권화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그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양자의 건전한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배타적 세계관에 좌우되지 않는 투명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 원칙에서 볼 때 앞에서 예를 든 사례들을 모두 부적절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무속신앙에 기대는 것은 신비한 종교적 애우라를 억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 종교적 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

니다. 단지 무속인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다. 엉뚱한 주술적 믿음으로 혹세무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로써 시민적 책임의식에 따른 정치적 선택행위를 흐리게 한다. 이는 정치인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특정 정치인에게 다짜고짜 안수를 해댄 행위는 해당 목사들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적절한 조언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특정한 종교적 예식으로 행해져야 할 일을 마땅히 그런 자리도 아닌 자리에서 했을 때 그 숨겨진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신의 영광을 임의로 도용해 왔을 때, 숨은 야욕은 거꾸로 장차 그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살 만한 행위이다.

특정 종교 세력 곧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사태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서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닌 바에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른 결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파당적인 이해관계로 결합할 경우 그 결과가 보편적 공공선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다든지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는 한 정치적 참여는 필연적으로 요청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주권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바로 그 신앙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신앙에 근거하여 공공적 책임의 일부로서 정치적 참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근거로서 하느님의 주권 개념은 지상에서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흔히 고대 근동에서 신의 주권은 지상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성서에서 하느님의 주권은 권력을 제한하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사회 안에서 지배와 억압을 부정하고,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그 백성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은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등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컨대 사사 기드온 이야기(사사 8:22~23), 왕권체제의 수립 요구에 맞선 사무엘의 경고(삼상 8:4~17)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신을 따라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명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주권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로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었고, 그것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마가 10:42),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요한 18:36)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 준다. 종종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에 대한 논란(마가 12:13~17; 마태 22:15~22; 누가 20:20~26)은 흔히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병존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황제의 것에 골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전망을 함축한다.

오늘 하느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피조세계 전체에 구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인식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민중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로마 8:18 이하). 정치경제적 불의와 생태적 위기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같은 뿌리, 곧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를 추구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비롯되는 위기의 현상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종교의 역할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근원적으로 신앙의 요청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동

시에 오늘날 민주적 현정질서가 추구하는 정교분리의 취지에 따라 규율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그 표현방식은 신앙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오늘 민주 현정국가 안에서 보편적 가치와 그 소통방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만의 세계관적 독단에 따라 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기 다른 세계관을 지닌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입장을 개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은 신앙이 그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에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요청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요청을 당대의 역사·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펼쳐져야 할 장으로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당대 사람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언제나 당대의 현실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육화되어온 역사를 환기하여야 한다. 복음의 그 육화과정을 외면할 때 교회는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국가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조건에서라면 그 독단의 파괴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가권력과 교회가 분리된 조건에서는 교회의 신뢰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영향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더욱 절박하게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 있는지, 그 조건 안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해아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교회는 다종교 사회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시민사회 안에서 스스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믿음의 체계는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이기에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안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가치체계와 접촉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종교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태도는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된다. 배타적 진리 주장을 외치는 종교보다는 포용력을 지닌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그 대화와 협력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협력의 방향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기 한국사회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이 안 보이는 20대 대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근거하되 동시에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한 공공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여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대 대선과정을 냉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압도하면서 선명한 정책대결의 과정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예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 자체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또는 소확행을 지향하는 공약은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약은 오히려 성별·세대별 갈라치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탓에 근시안적 득표 전략에 유리할지 모르나 결코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지금은 한국 사회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이른바 추격국가로서 경제성장에 몰입해왔던 시절을 지나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으로서 선도국가의 역할을 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선거는 그 전환기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계기이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를 일궈냈지만, 그 명암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회이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는 말할 것 없거니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 극복,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정착, ‘신냉전’으로 일컬어지는 정세 가운데서 질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과제,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원활히 감당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번 대선은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 공통의 과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현재 대선국면에서 여타의 후보들에게서는 이와 관련한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을 볼 수 없는 반면 민주당(2050년 탄소제로, 기후에너지부 창설, 신재생에너지와 소비를 연결시키는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세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 플라스틱제로 등)과 정의당 후보(탈핵과 석탄발전 종료, 재생에너지 50% 전력생산, GDP의 2% 녹색 전환 투여 등 가장 포괄적인 환경정책)에게서 그나마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정도이다. 오늘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오늘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체제의 전환 전망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의미있는 정책들도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주의적 접근의 한계 안에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체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생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 해법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법과 긴밀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은 대다수가 가장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사회 의 과제이다. 선거 국면마다 등장하는 경제위기의 논리는 기만이요 허구이다. 문제는 불평등이며, 따라서 사회적 위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자본소득분배율보다 노동소득분 배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그 격차가 유난 히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격차까지 더하면 불 평등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사회는 애초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말할 것 없고, 노동시장 자체마저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어 다양한 층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 기업과 중소영세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의 여러 균열 현상이 심각하다. 이동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 태이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극한의 상황 에 처해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여 한국형 복지 국가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의 규모는 성장했지만 기존의 복지 유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사회 안에서 고유한 복지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또는 기본소득은 양자택일의 사안이라 기보다 충분히 수렴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그 실현과정에서 적절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에 편승하는 사회적 차별의 극복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른바 추 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위상 전환의 과제는 경제적 성장의 차원으로 국한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예컨 대 인권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불평등구조

에 따른 심각한 노동의 위기와 차별은 말할 것 없거니와 성차별 양상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역시 심각하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오히려 혐오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암고 있다. 사회통합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그 위험한 조짐이 보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은 두말할 것 없는 숙원과제이다. 분단과 극한적인 전쟁의 경험은 남북 간 갈등의 비극 그 자체로도 문제려니와 이후 한국사회의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되어 왔다. 분단의 상황이 때로 민주화와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부조리한 체제와 현실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역대 민주정부하에서 일관된 남북화해의 시도, 그리고 가깝게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은 남북 간 갈등을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이루게 되리라는 기대를 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지고 지금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자 해도 국제적 역학 관계 안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며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판이니, 상황은 더욱 난망하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와 더불어 담대한 상상력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단순히 국력의 위세를 과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견국가로서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강대국의 세력 각축이 벌어지는 최일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과거 불리했던 그 요인을 능동적인 역할을 펼치는 지렛대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별히 신냉전체제로 불리는 국제적 역학관계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친미 또는 친중 가운데 어느 일변도로 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 가운데 국제관계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그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전 촛불민의를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을 안도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대되었던 민주주의가 매우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졌던 정부하에서 이렇다 할 만한 개혁적 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재벌, 금융, 행정, 사법, 언론 등 여러 분야의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선출권력을 무력화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실상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의 후보대결에서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을 맡은 세력이 정부의 무능을 앞세워 표심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강화한 세력이 오히려 공정을 내세우며 의기양양한 꼴이다. 일종의 도착적 증상이며, 그 증상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의 기본권과 대표권을 강화하며 동시에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절박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전환기의 한국 사회의 과제가 이뿐일까?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대략 큰 그림의 윤곽을 그리는 정도로 그 과제를 예시했을 뿐이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 차이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언론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당장의 근시안적 득표 계산 때문에 선도적 의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저 도토리 키 재기와 다름없는 공약들만 견주는 가운데 편 갈라치기로 대선이 귀결된다면,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결과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의 무력함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여 퇴행하는 사태로 귀결되어서야 되겠는가?

기존의 정치구도를 뒤흔드는 주권자의 역할

지금 우리는 엄중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다. 정작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과 그 정치세력은 마치 스포츠 경기 치르듯 그 중대사를 희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현재 정치세력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사로서 이를 받아들이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가늠하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

며, 냉소하는 태도로 관망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동시에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 세력이 짜놓은 구도 안에서 세력을 결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최형묵

현재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민중신학회장, NCCK 정의평화위원장, 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계속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등 여러 저서와 역서가 있다.

공공신학적 정치참여,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의 선 구성하기

성석환

장신대 기독교와문화/도시공동체연구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 대선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서구사회도 정치적 의제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는 서구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우리 사회처럼 그 중간지대가 협소한 경우도 드물다. 말로는 중도보수 혹은 중도진보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몰려서 사생결단에 나선다.

20대 대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는데 대체 왜 정치는 매번 이 모양인가?’라는 자조를 뱉는 이들이 많은데, 정치의 영역이 공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관전하거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혐오와 증오에 동조하며 은밀히 즐기는 이들이 많다. 참여의 구색은 있으나 그 정서는 상대를 섬멸하고 제거하는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자폐적 정치참여의 흐름을 비판할 때, 한국 사회에서 종교계의 행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사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체계와 체제 속에 갇혀 있으면

서도 시도 때도 없이 종교의 논리로 공적 의제들을 재단하는 통에 민주적 진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신교회의 대단한 동원력과 응집력은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각종 사회적 법령의 입법을 미루고 머뭇거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개신교회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점차 비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개신교회 만큼 강력한 응집력과 조직력을 보유한 제도적 주체가 별로 없다보니 정치인들은 교회를 찾아 표를 구걸하고 교회는 그 틈에 여전한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모종의 결탁이 성사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경청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피차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도구적 관계에 불과하다.

공공신학은 서구 기독교계가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의 사회적 의제를 두고 신학적 대화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등장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게토화된 신앙의 언어를 이성과 합리성의 언어로 합의된 공론장의 언어로 번역하여 신학적 상상력과 성서의 지혜로 더 나은 사회, 공동의 선을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상황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상황신학적 방법론과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그것은 이전보다 확장된 시민사회의 공간을 신학의 자리로 삼기 때문이다.

공공신학의 자리가 시민사회의 공간 혹은 공론장이라는 것은, 마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도 상식적인 표현이지만 한국교회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 합의하는 바는 적지 않다. 계급갈등과 이념투쟁을 사회적 진보의 필수적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권력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면서도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이들에게는 아마도 선명성도 동원력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실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재현되는 이 파괴적 갈등과 혼란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상생의 합의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적 참여는 이제 정치권의 지형에 따라 작동되어서는 안 되며 비록 그 영향력이 왜소해진다 하더라도 공론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지혜를 중재의 대안으로 제시하자는 것을 한국적 공공신학의 정치적 참여의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의 정치참여와 정교분리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극단적인 두 입장이 강세다. 교회의 정치행위는 본질적인 것이어서 정치적이지 않은 신앙의 실천이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 하나다. 그 렇지만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정치행위를 상정한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주장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이런 주장은 교회가 정치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넘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권력과 이념의 지향성과 등치시키는 실수를 비의도적이라 해도 정당화해 왔다.

이에 비해 다른 한쪽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정치행위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 우긴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속 정부의 간섭이나 관리를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는 세속적 정치인들의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질적 차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이념지향적 인사들과 유사한 권력지향성을 보이지만 역시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고대 교부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스-로마의 철학들은 정치를 일상의 삶과 구분하지 않았는데 근대의 발전은 그 일상의 권리가 신분과 성별을 넘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이데올로기로 공인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급격히 정치적 공간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주로 이단에 대한 변론의 주요 임무였던 신학의 역할이 교회의 정치제도를 조직하고 신학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로마 황제체제와의 유사하게 제도화된 중세 교회체제에는 로마제국의 권력다툼도 그대로 전이됐다. 종교가 현실정치를 압도하는 권력을 누리며 일상의 공간들을 장악했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대변되는 종교의 권력화 욕망은 정점에 이른 후 종교와 정치의 인문적 본령을 회복하자는 르네상스의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한다. 종교화되어 있던 세속적 정치 영역은,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왕에 시작된 종교자유의 정치적 선언은 계동의 시대에 이르러서 공적 영역으로부터 종교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정치권력의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공간에 종교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관장하는 별세의 탈정치화를 마치 교회의 본연의 자리로 회귀하는 것인 양 수용했다.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운동 등의 내부의

역동을 통해 기독교의 독립적 지위를 구축하게 된 교회 구성원들은 매우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 세력은 국가종교체제를 법제화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헌법에 합의했다. 국가종교 체제를 탈피한 기독교회는 출신 국가의 종교적 전통에 따라 신대륙에서 교단과 교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국가적 공공성에서 벗어난 각 교단의 존립은 교세 확장과 분파를 다양화하는 선교전략으로 전개되었는데, 정치적 공공성과 별개의 공공성을 구제와 선교에서 찾으며 정치적 공론장과는 구분된 종교의 영역을 근대화하였다.

이렇게 가시화된 ‘정교분리’ 원칙은 20세기 들어와 교회 내부의 ‘선의의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파와 교세의 확장은 곧 세계선교의 열매였으며 종종 사회변동의 중대 요소로 작동하면서 정치적 여론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 부상하기도 했다. 규모와 숫자에 기댄 교회성장 이데올로기는 과거 권력을 직접적으로 획득함으로써 가능했던 정치행위를 간접적으로 더 세련되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즉 자본주의 체제와 연동된 교회의 정치개입 전략은 중세의 제국체제와 연동된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된다.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내부에서 동원가능하게 되자, 교리나 신앙고백과 배치되는 듯 보이는 사회정책이나 정치적 의제를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의 도덕적 역할에 대해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근대적 시민사회는 교회가 교세의 힘을 앞세워 정치적 공론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

2004년 마지막 근대주의자라 불리는 위르겐 하버마스와 당시 바티칸 신학부 장관이었고 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는 라칭거 주교가 윈헨 가톨릭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처음 만나 이성과 종교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했다. 근대가 구축해 온 정치적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911 사태 이후 종교가 정치적 영역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확연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이성과 신앙, 정치와 종교의 소통 필요성을 확인했다.

사실 ‘정교분리’란 근대의 산물이다. 크리스텐덤 지향을 세속정치의 권력을 탐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겠으나, 복음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실현하고자 함은 기독교의

태생적 특성이다. 정치의 영역을 선교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의사소통이 도덕적 토대와 윤리적 합의가 부재하였을 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거인이 확인해 주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정치적으로 허용하게 된 결정적 모멘텀은 사실 종교개혁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종교를 사사화하는 자충수가 되었다고 자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그러한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속화 논리가 탈마법화, 탈종교화의 가속화를 전제하였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 종교는 여전히 지구사회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찰스 테일러, 호세 카사노바와 같은 학자들은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세속화 논리를 뒤집고 오히려 탈세속화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더 근원적으로 근대주의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서구의 근대주의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을 비판한다. 존재론적으로 기독교의 정치적 기여가 없이 근대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없었고, 윤리적으로도 토대와 합의가 없이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선은 종교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곤 한다. 신앙의 언어를 이성의 언어로 번역해서 공론장에 참여할 것, 비판을 수용하여 대화의 소통을 통해 수정 가능성을 수용할 것 등이다. 그렇게 한다면 종교도 정치적 공론장에 한 표를 들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 고유한 도덕적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교분리’는 근대의 법적 개념이지 민주적 현실에서 도식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은 ‘정교분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하여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이신칭의’로만 환원된 종교개혁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몽주의와 세속화 논의를 수동적으로 내면화한 개인주의, 성장주의 세력이 강조해 온 일면일 뿐, 종교개혁의 총체적 합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인사제론’, ‘두 정부론’, ‘직업소명설’, ‘하나님 주권’, ‘대의(장로)정치제’ 등에 담긴 종

교개혁의 정신은 종교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질서, 즉 ‘뉴 노멀’을 가져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기원적 성격으로서의 종교개혁 사건의 의미를 축소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더 다양해지고 시민사회는 더 성숙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정교분리’는 신학적 성찰의 결과가 아니다. 교회의 정치참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형성하는 계기였다. 스스로 권력화하고 독점하는 정치세력화를 극복하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적 원리를 제공했다. 즉 ‘공동의 선’을 위한 교회의 정치참여는 정당한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제 성숙한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공론장의 일원이 되어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교회

메이지 유신 시절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 일본은 천황을 종교가 아니라 정치체제 안에 편입시킨다. 이렇게 수립된 일본식 정교분리 원칙은 조선식민지에서 그대로 관철되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교육과 의료지원에 나섰는데, 간접적으로 조선어와 전통을 보전하는 일에도 기여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탈정치화 경향은 일제강점기 강요된 근대의 공간에서 내면화되었다.

300년에 이르는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한국은 제국주의와 전쟁, 그리고 독재시기를 거치면서 온몸에 상처를 내며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문자 그대로 자주적으로 획득한 ‘자주독립’이 아니었던 탓에 분단이라는 비극을 지금까지 안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술한 침략과 침탈을 겪어왔지만, 서구 열강이 개입한 한국전쟁은 20세기의 냉전체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음으로써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지속성을 내재화했다.

놀랍게도 한 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한국이 이토록 빨리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정치적 민주화 여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덕이라 할 것이다. 물량적으로는 독재의 시기에 한국경제의 기틀을 세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이라는 열매는 독재와 맞서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민주공화정의 원리를 터득해 온 시민社会의 성숙이 세

계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문화강국을 자랑하게 만드는 직접적 결과물들이 그 반증이다.

다만 시민사회의 성숙도와는 거리가 있는 정치세력의 후진성은 여전히 문제이고, 그 후진성에 동조하는 물신주의 기득권 세력들의 공고한 결탁이 여전히 강고하다는 점에서 아직 한국사회의 질적 선진화는 갈 길이 멀다. 분단국가로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놀라운 일이 분명하지만, 정치세력의 후진성은 보건대, 이러한 성과는 독재시기를 거치며 묵묵히 자기 뒷을 감당해온 시민들 덕택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의 끈질긴 헌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세력의 후진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젊은 세대로부터 퇴진하라는 압박을 받는 소위 ‘민주화 세대’는 왜 극복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 이는 한국적 민주주의 형성사에 드리워진 투쟁의 산물이다. 제국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두고 좌우 대립으로 갈라섰고, 해방의 공간은 냉전체제로 고스란히 채웠으며, 독재시기에 투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배제와 소외의 정치적 문법을 한국적 정치의 DNA로 남겨 놓았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값싸고 넘쳐나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거대한 자본축적 구조를 제도화 하였는데, 재벌체제와 독재정권의 결탁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사에 독특한 기여를 하였다. 때로 서로 반목하면서도 결국은 공조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두 세력 간의 연대는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근간이다. 87년 체제 이후 2017년 촛불시대에 이르기까지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들만 교체됐을 뿐 두 세력 간 연대는 본질적으로 유효하다.

이를 개혁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민주화 세력 혹은 개혁 세력은 때로 공산주의자로 위험 분자로 분류되어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소위 민주정권이라는 정당성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 축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고 물려가야 할 후진적 정치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바로 그 ‘투쟁의 정치’가 남긴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정치’가 없었던들 지금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없었을 것이니, 투쟁과 배제의 양 축의 긴장을 완화하고 완충할 시민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을 확장하여 정치인들이

독점하는 정치적 공론장을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2017년 이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시민사회의 정치인식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제 세력들이 투쟁의 문법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로 작동하는 정치 공론장을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의 새로운 공적 역할의 소명이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해득실의 차이를 조정하고 간격을 좁히는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현실 정치세력들에게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이들이 참여를 허용하는 도덕적 토대와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다. 종교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공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신교회는 가장 정치적인 집단으로 묘사되면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메시지는 탈정치적이지만 정치적 행보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시민사회의 의제에 대한 해석능력도 낮고, 신앙의 언어를 번역 없이 그대로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주류 한국교회가 정치에 참여해 온 역사는 한국적 정치의 투쟁의 역사와 그대로 연동된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신앙체계 안에 수용하여 권력을 위해 복무하며 부흥성장과 세력 확장의 시기를 거쳐왔다. 각종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득권 세력과 후진적 정치세력 간의 결탁에 편승했는데,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주류 교회들은 이 결탁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물론 정의와 공의를 외쳐 온 양심적 기독교회와 인사들도 없지 않았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수립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독재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이런 진보적 기독세력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정치화를 교정하고 시민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류 교회들을 설득하여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과거부터 쌓인 양측의 골이 너무 깊다.

한국적 공공신학과 정치참여

20세기에 회색지대로 비판받던 영역은 21세기에 와서 긴히 확대되어야 할 시민사회 공론화 지대로 변모해왔다. 진보든 보수든 냉전체제의 투쟁적 대립을 전개하는 진영 논리가 작동하면 중간지대는 쓸모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념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 을 모색해야 하는 때가 되면 중간지대는 다양한 주체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구성적 (constructive) 장의 역할을 한다. 민주화라는 정치적 목표가 명확할 때와는 달리 지금 은 이런 공론장의 확대가 더욱 긴요하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는 과연 오겠는가 싶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없지 않다. 투쟁의 정치학을 몸에 익혀온 기성세대의 눈에는 2030의 흔들리는 표심이 영 마뜩잖겠지만, 민주화 시대 이후 정치적 공론장에서 사라진 듯한 청년들의 소리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본다면 그동안 암 울하고 우울했던 청년세대론에 비해 오히려 역동적이라 좋다.

정치권에서 청년의 표심을 도구화하는 행태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시민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2030의 역동성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소위 ‘이대남’, ‘이대녀’ 이슈로 불거진 성별대결 양상을 넘어 청년들이 정치적 공론장의 주체로 세력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만약 도덕적 지도력을 지닌 세력이 그들을 지지하고 정치적 자리를 잡도록 후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공공신학의 구성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공공신학은 특정 이념적 지향이 반영된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일방적 태도 를 지양한다. 성경에 담겨 있는 신앙의 지혜를 모든 이를 위한 공동의 선을 위해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를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신학적 논리의 설득 가능성을 고도화하고 공론장의 토론을 통해 자기 수정 을 거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성경의 지혜가 여러 지혜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 기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공론장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소통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진보적 진영이나 보수적 진영이나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논의가 대체로 사회적 논의에 비해 일차원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투쟁적 배제와 권력의 주위를 맴돌며 기웃거리는 정치 행태를 버리고 시민사회와의 진지한 토론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투쟁과 대결의 후진적 정치에서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용인하며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기생적 행태를 내려놔야 한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서구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토대로 한 근대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성장한 한국이 선진국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민주주의 역시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발전해왔지만, 현재 공론장에서 소외된 한국교회에게는 공공신학적 정치참여의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 교회의 입장을 고정해 놓고, 정치적 공론장의 의제에 대해 정답을 강요하는 무례한 행태는 이제 교회의 고립만 가속시킬 뿐이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 신학적 관점의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의 대안, 하나의 지혜로 자격으로 참여하고 구성적 과정에서 상대의 비판과 토론에 개방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신학적 견해에 비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교리적 차원의 타협까지 고려할 이유도 없다.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견해를 청취하게 되는 것이 목표다.

공공신학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구성적 논의에 참여한다고 하여 사회적 의제에 대한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공공신학은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가치로 투쟁의 정치학을 대체하려는 중재자의 역할에 우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논의에 정당하게 개진되도록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갈등, 성별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으로 한국적 민주주의가 투쟁의 정치학에 의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공공신학의 실천은 교회가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중재하고 신학적 상상력과 성경의 지혜가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교회에게 계몽의 대상이거나 부정해야 할 경쟁자가 아니다. 교회의 정치참여는 이제 시민사회의 원탁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대 대선과 교회, 그리고 청년

20대 대선은 여려모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5년 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선거가 되었다. 절대악으로 규정되었던 세력이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지지를 받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던 정권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의 인간적 면모를 보건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이들과는 너무도 다른 인생여정을 보며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통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행사하는 체제이니 정권이 연장되거나 바뀌거나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이 투쟁의 민주주의 역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의 발전보다는 정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적 정치가 필요하다.

한국적 공공신학은 교회가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실현할 가장 큰 가능성을 한국교회의 잠재력에서 엿본다. 강력한 동원력과 헌신을 매개로 하는 응집력은 한국교회가 정치를 바꾸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나서는 것보다 더 실현 가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예배시간에 정치인을 선전하고, 정치인의 방문을 명예로 여기는 풍토에서 공공신학적 정치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구적으로 논의되는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도시문제, 신자유주의의 모순, 불평등, 청년 문제, 포스트 팬데믹의 뉴 노멀 등 성숙한 정치의 공론장이 필요한 사안들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면,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 어느 정당과 후보가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선을 누가 지향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활동가 외에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런 사안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투쟁과 대립의 정치학에 표를 맡기는 교인들이 많다.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은 진보적 정치인을 보수적 교계 단체들은 보수적 정

치인을 지지한다고 공적으로 밝히고 있다. 차라리 양 진영이 함께 모여 기독교계 내부에서 진지한 토론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스로 정한 교회의 헌법마저 마음대로 어기는 불법을 감행하면서도 자정의 능력조차 상실한 교회가 누구를 지지하든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희망은 역시 청년들에게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적 실체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청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념과 노선에 따라 편을 갈라 싸우면서도 부흥과 성장에 목을 매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소위 MZ 세대의 청년들은 투쟁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청년들을 응원하여, 정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내세우자는 것이다. 20대 대선이 끝나면, 청년들을 도구화하여 선거에 활용한 정치권은 또 다시 이전투구의 파괴적 대결에 나설 것 같아 우려된다. 청년들이 권력 지향적 투쟁에 익숙해지기 전에, 공론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치세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지지하고 그 터전을 마련해 주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복음의 가치를 정치적 공론장에서 실천할 때, 이념과 노선은 서로 달라도 존중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이들을 교회가 격려하는 역할이, 넥타이에 걸은 양복 차려입은 교계 인사들이 나서서 정치권에 참견하거나 기웃거리는 것보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별 경쟁력 없는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 배제와 혐오의 정치학을 계승하기보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교회의 품에서 자라게 하자.

성석환

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와문화)에서 가르치며,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소장이다.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위한 연구와 최근에 교회의 디지털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김 성 한

MCC 동북아지부 대표

한국교회에서 “한줌도 되지 않는” 아나뱁티스트(Anabaptist, 재세례파)가 이 복잡한 현실 정치에 대해 어떤 할 말이 있을까? 그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급진적 종말론에 심취하여 뮌스터를 점령했던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서 농사를 짓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소종파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시편103:12)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우선 아나뱁티스트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살펴보자.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아나뱁티스트는 16세기 종교 개혁가들도 문제 삼지 않았던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 질문한 풀뿌리 개혁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맹세하지 말 것, 폭력에 참여하지 말 것, 정부부서에서 일하지 말 것 등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보면, 마치 그들은 정치적 안정을 뿌리 채 흔드는 사람들처럼 보기 쉽다. 아나뱁티스트에게 경제적인 나눔과 사회 평등의 모델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

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타락한 세상“과 분리된 자발적인 공동체로 정의함으로써 아나뱁티스트들은 유럽을 ”기독교“사회로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¹

지금 우리에게 유아세례와 성인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전혀 위험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16세기 크리스텐덤(Christendom, 기독교국가)에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 주장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선동적 행위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많은 아나뱁티스트들이 투옥되고, 고문 받고, 추방당하고 처형 되었다. 현재 아나뱁티스트는 신자들의 세례(성인세례)를 실천해온 아미시,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와 같은 교파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모든 전통이 그러하듯이, 아나뱁티스트 신앙 역시 약 50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뿌리내리며 성장했다. 나는 2022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의 시선으로 “어떻게 교회가 현실 정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고 한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은 이 질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1. “그의 나라...”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나뱁티스트가 위험하게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질문과 실천이 천년 이상 지속 되어온 크리스텐덤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세기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 내의 소수자 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포함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갔다. 로마제국의 서쪽을 통치하게 된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 중 하나로 공인하였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변방의 핍박받는 종교, 소수자의 종교에서 기독교인 황제의 인정과 지원을 받는 종교가 되었고, AD 380년 무렵에는 드디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 처음 300년 동안의 교회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변화를 “콘스탄티누스 전환” 혹은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른다.

1 존 D. 로스/김복기 옮김 『역사, 메노나이트 존재 방식』(대장간, 2020), 93.

가톨릭 교회사가인 에른스트 다스만(Ernst Dassmann)은 콘스탄티누스 전환에 대한 비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한다 – (1)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한 진심, 그의 정통 신앙, 개인적·도덕적 태도는 의심스럽다 (2)교회는 권력의 유혹으로 타락했다 (3)신약성경 규범들을 잊고, 교회는 이교인의 종교성을 받아들였다. 폭력을 수반한 선교는 내적 개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4)‘콘스탄티누스 전환’은 1,500년 이상 교회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운명적이었다.²

“1,500년 이상 교회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콘스탄티누스의 전환 속에서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은 따르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예수를 너무 높은 곳에 앉혀 두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신자들의 매력적인 삶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교회의 일부가 되었던 교회의 증언은 크리스텐덤의 국경선 바깥에서 점령과 개종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선교로 전환되었다. 살롬의 비전이 자신들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일관되게 폭력을 거부했던 처음 300년 동안의 교회는 제국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엄밀히 따져보면 복음이 로마제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국의 권세가 교회의 복음을 뒤집어 놓았다.

2022년 한국에서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텐덤을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와 정치에 대한 논의는 교회와 국가 혹은 그 둘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선 이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종교 사회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크리스텐덤 논의가 우리의 상황과는 먼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했으며, 교회가 이해하는 스스로의 공적 역할과 선교적 사명은 크리스텐덤의 모습으로 작동되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크리스텐덤에 대한 관심은 탈기독교국가 (Post-Christendom) 맥락에서 새로운 교회와 선교를 모색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운동과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호교론을 넘어선-) 다양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증가해왔다. 무엇보다 꾸준히 증가해 온 1세기 교회 혹은 처음 300년 동안의 교회에 대한 다양한 출판 현상은 현실 기독교에 대한 실망과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 크리스텐덤에 대한 논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치열한 성찰로 깊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48년 “제헌국회 개회기도 사건”을 부각하며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추앙

2 에른스트 다스만/하성수 옮김 『교회사 II / 1』(분도출판사, 2013), 29.

하는 주장은 이승만이 독재자였기 때문에 비판되어야 할까 아니면 한국 기독교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크리스텐덤에 대한 추구도 성찰과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일까?³

200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메노나이트 학교인 고센칼리지(Goshen College)에서 토론이 열렸다. 신학자, 역사학자, 윤리학자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한 메노나이트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회는 흥미로운 자리였다. 토론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전통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와 같은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었다.

긴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된 나라에서 온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이야기는 무척 순진한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최악과 차악을 서둘러 결정하기에 앞서서 교회와 국가, 신앙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었다.

아나뱁티스트 전통은 교회가 어떻게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교회의 우선 된 자리가 어디인지, 교회는 누구인지를 묻는 말로 기여한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미 탈기독교 국가(Post-Christendom)에 들어선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크리스텐덤의 신학과 실천에 기반을 둔 현실 정치 참여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⁴

3 “이승만이 감리교인이고 반공주의자라는 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의 이승만 독재에 대한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었다. 마치 콘스탄틴 대제나 나타난 것과 같이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일제 정부에 고임 받던 친일수재들을 마구 고관에 등용했다. 이것은 미국의 친일정책이 이승만의 심장부에 침투된 치명적인 병균이었다는 평도 적지 않다” 김재준, 『범용기凡庸記(2)』(파플, 2019), 241.

4 김선일은 한국사회가 뚜렷하게 크리스텐덤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문명과 사조의 차원에서 기독교가 배제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현대사에서 개신교회가 지녔던 일시적 우위가 약화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더욱 정확할 것이다”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그의 진단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가신도를 통한 국가종교의 경험과 학습, 해방 후에도 교회가 일관되게 지향해왔던 기독교국가-민족복음화의 구체적 노력에 주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김선일, “탈교회 시대의 교회: de-churched인가, post-churched인가?” 김동춘 책임편집 『탈교회-탈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느헤미야, 2020).

2. “그의 의...”

그렇다면 크리스텐덤 이후, 탈기독교 시대에 교회는 현실 정치에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우선 된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첫 번째 재세례(신자의 세례)가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취리히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 급진주의자들의 행동과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취리히 시의회는 2년 뒤인 1527년 1월 첫 번째 재세례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펠릭스 만츠(Felix Manz)를 수장형에 처한다. 그 뒤로 아나뱁티스트들에 대한 체포와 처형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최초의 아나뱁티스트의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술라이트하임(Schleithenim) 고백서가 작성된다. 일곱 문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일곱 번째 항목인 “칼의 사용”에 대한 것이다.

“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밖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세속 정부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선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인하지 말고, 단순히 경고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 것을 말하며 대신 출교시킨다...”(술라이트하임 신앙고백, 1527).

세속 정부, 국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칼의 사용’과 같은 폭력에 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300년 동안의 교회와 같이 원수사랑과 비폭력을 제자도의 핵심으로 여기는 이들의 급진적인 태도는 현실 정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으로 여겨졌다. 물론 들불처럼 퍼지는 아나뱁티스트 중에는 1525년의 농민 반란이나 1534년 뮌스터 비극같이 폭력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메노 시몬스(Menno Simons)가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지도자가 되면서 비폭력 평화주의의 입장은 더욱 분명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크리스텐덤 이전의 교회가 가졌던 평화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갖게 된 메노나이트는 흙날 웨이커, 형제단 교회와 함께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 전통을 이루게 된다.

내가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화교회라는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교회 전통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혹한 실패와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평화의 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숙고와 선택

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렇다면 세상 그 어디보다 평화가 간절한 이곳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를 잘 이해하고,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어떤 격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평화활동가 이용석은 세계의 갈등과 군수산업체의 공생관계에 대해 말한다. 한반도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북미 간의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던 2017년 세계최대의 군수산업 체인 록히드 마틴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다. 그러나 높이 치솟았던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폭락했다.⁵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의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전쟁과 폭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유다.

그렇다면 교회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 판문점으로 쏠려 있던 그 시간에 타임지 인터넷판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다. 기사 제목은 “왜 남한의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였다.⁶ 전쟁이 남긴 기억과 분단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아픈 교회의 모습이다. 어쩌다 한국 기독교는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하나님의 샬롬의 비전을 버렸을까? 어쩌다 교회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를 만들어 비싼 값으로 파는 무기상들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을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무기를 사고, 더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환상의 일부가 되었을까?

김선욱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못하는 반평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반평화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뿌리는 개인의 심리에서 시작하여, 집단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소위 ‘마음의 습관(the habits of the heart)’을 살펴볼 때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한국 기독교를 구성하는 한국 기독교인의 마음의 습관은 어떤 것일까?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5 이용석 『평화는 처음이라』(빨간소금, 2021), 98.

6 Kelly Kasluis & Kevin Grant, April 26, 2018. “Why South Korea’s Conservative Christians Don’t Want to Get Cozier With the North” (<https://time.com/5255850/why-south-koreas-conservative-christians-dont-want-to-get-cozier-with-the-north/>)

7 김선욱, 『평화와 반평화—평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중 “초판 서문” (박영사, 2021).

한국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 동안 국가주의에 굴복하고, 분단과 한국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교회 성장과 선교의 동력으로 삼아 성장해 왔다. 교회는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한다고 주장했지만, 교회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성서는 “거듭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한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성찰과 끊임없는 변혁과 성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음의 습관은 평화롭지 않은 듯 보인다.

아나뱁티스트를 포함한 평화교회 전통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선교 방향이 샬롬이며 그 내용이 화해의 사역이라고 믿는다. 현실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하며, 배제를 정당화할 때, 막힌 담을 헐고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어떤 후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지만, 교회는 침묵한다. 교회는 무속과 주술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반대하지만,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는 듯 보인다. 우리의 길들여진 마음이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평화의 문화를 일구어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반평화의 시대에 담당해야 할 가장 긴급한 하나님의 선교다.

3. “구하라”

앤디 크라우치는 폭력, 지배, 힘, 강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파워/권력에 대한 논의에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당전쟁론으로 구체화되는 ‘정당한 물리력의 행사’에 대한 입장이 아나뱁티스트의 비폭력 입장과 동일하게 “파워가 폭력은 아니라 해도 물리력에 대한 것으로, 기독교적 입장의 관심은 물리력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데 집중하는” 실수를 자주 반복한다고 말한다.⁸ 크라우치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과 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외에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다양한 권력을 사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⁸ 앤디 크라우치/김명윤 옮김 『사람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IVP, 2022), “제7장 힘, 강요, 폭력”을 참고하라.

비폭력을 강조하는 아나뱁티스트의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모습으로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와 저항으로 표현되었다. 권력에 대한 이런 경계와 의심은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번영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권력을 물리적 폭력과 우선 연결하는 이 오랜 ‘마음의 습관’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많은 힘에 대한 기만적 태도나 그 힘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16세기보다 훨씬 복잡하며 모호함(ambiguity)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⁹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Seek first-)” ‘정치과잉’과 ‘정치혐오’를 오가는 현실에서 교회는 그 길을 잃은 것 같다. 지금 우리의 정치에서 투표가 중요하지만, 정말 한 번의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4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은 무엇일까? 그때마다 교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의제에 따라 혹은 그 후보의 신앙 여부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는 “문화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 “세계 변혁”과 같이 정복과 장악과 지배를 뜻하는 콘스탄티누스주의적 참여 형태를 버리고 “신실한 내적 현존”을 통해 모든 타인을 위해 샬롬을 실천하고 추구함으로써, 기독교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나는 헌터가 제안하는 “신실한 내적 현존”이 개인주의, 경건주의, 정적주의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교회로 신실하게 현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가 기독교의 독특한 내러티브라면, 그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비폭력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비폭력과 샬롬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먼저 온전히 경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 안의 성폭력을 눈감는 교회가 세상에서 평화를 증언할 수 없는 이유다. 배제와 혐오의 언어로는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9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의 변화에 대해서는 Leo Driedger & Donald B. Kraybill 『Mennonite Peacemaking—From Quietism to Activism』(Herald Press, 1994)을 참고하라. Lawrence Burkholder 『The Limits of Perfection』(Pandora Press, 1996)은 두 왕국, 분리 모델에 기초했던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가 맞이한 복잡하고 모호한 현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10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배덕만 옮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새물결플러스, 2010), 204, 277, 351, 413, 421.

님을 온전히 증언할 길이 없는 이유다. 교회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롬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양한 권력은 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 그 선물이 잘 사용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충만함과 번영이다. 하나님의 살롬이 다시 등장하는 지점이다.

나가며 – 인내의 발효를 통한 신실한 현존

앨런 크라이더는 크리스텐덤 이전의 초기 기독교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내의 발효”에 주목한다. 크라이더는 박해와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수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웃 및 적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며 살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신앙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불의한 자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¹¹ 그리고 이 인내의 발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아비투스 (habitus)를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초기 기독교는 도제관계에 기초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교리 교육과정과 새로운 아비투스가 시행되고 표현되었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아비투스를 변화시키려했다.¹²

평화를 지향하는 아비투스, 새로운 ‘마음의 습관(the habits of the heart)’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교회는 그 방향을 바꾸고, 평화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크리스텐덤을 지향하는 교회의 정치적 시도는 이미 1500년의 역사로 그 실패를 증명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롬의 통치를 경험하는 “신실한 내적 현존”을 통해 서만 현실 정치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1 앨런 크라이더/김광남 옮김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IVP, 2021), 67.

12 크라이더, 83.

김 성 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동북아시아 지부 대표로 일하고 있다. 교회안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IVP, 2021)을 썼다. 「평화저널 플랜P」의 기획위원이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참여하며 평화의 이야기를 더하고 있다.

기사연 소식

2021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발표

(기사연TV https://youtu.be/YQ-PF7F_wW4I)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자료(Raw Data) 신청

☞ <https://forms.gle/aXZXyXM21kCMkUcK7>

성소수자 교인을 위한 목회 및 선교 안내서 출판

(기사연TV <https://youtu.be/s23HuMiFC4k>)



책 구매 방법☞ <http://jpjc.org/books/cisjdbbook1/>

‘모두의 도시’ 세미나

강사
이민희 토목공학과 도시계획, 신학을 공부했다.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 활동한다.

일정 및 개요

[1강] 2월 21일(월) 저녁 7시 도시에 대한 권리 이론
[2강] 2월 28일(월) 저녁 7시 도시 공간에 대한 사용 권리
[3강] 3월 07일(월) 저녁 7시 도시 행정과 정치에 대한 참여 권리
[4강] 일정/장소 추후공지 도시에서 권리를 중시한 해외 주요 현장들

장소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지하 공간이제

신청인원 선착순 10명
참가비 2만원 ('도시와 권리' 교재 별도 구매)
참가신청링크 <https://url.kr/b56xys>
문의 010-9353-4855

주최 옥바라지선교센터 교육과신학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어쩌다 쌀롱 (기사연TV www.youtube.com/c/기사연TV)

Ep.15 비대면 온라인예배 2년,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Ep.16 제20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연리포트 통권 19호

발행일 2022년 3월 4일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02_312_3317
www.jpic.org
cisjd@jpic.org

